

일본의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 움직임을 보면서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뒤이은 일왕 관련 언급으로 한일 관계가 수교 이후 최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급기야 일본은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하고,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자고 형식적으로 구상서를 보내더니 당연한 우리의 거부에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단독으로 제소하겠다고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을 시켜 공식 발표토록 했다. 그리고는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및 한일 재무장관회담 중단, 한일통화교환(스왑) 협정 중단 검토에 이어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출마마저 훼방놓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흘리고 있다.

시마네현에서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더니, 서울 한복판에서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라는 사람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하는 망언을 하여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는가 하면, 초중고교 교과서에 이어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에 까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를 한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빌미로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생각해 보면 독도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길게는 극심했던 왜구들의 침탈을 우려하여 울릉도에서 우리 백성들을 육지로 데리고 나온 이후 빈 섬이 된 울릉도로 일본의 어부들이 몰래 고기를 잡으러 드나들던 17세기에 야기된 문제이니 300년 이상 된 문제이고, 짧게는 일본이 러일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군사

김 병 렬

-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국제법)
- 한국국제법 이사
- 안보연 연구조정관



적 필요성에 의해 독도를 편입이라는 이름으로 강탈했던 1905년 이후로 만 해도 100년 이상 된 문제이다.

이러한 독도문제는 1696년에 있었던 안용복의 도일활동을 계기로 도쿠가와 막부에서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와 독도 주변에서의 어로활동을 금지시키게 된 후 1877년에 일본의 태정관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가 이를 다시 확인하고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하여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면서, 차후 일본 정부에서 제작하는 모든 지도에 두 섬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음으로써 완전히 끝났던 문제이다.

이처럼 완전히 끝났던 문제가 일본의 러일전쟁 도발로 인해 재연된 것이다. 러시아의 강력한 해군력에 일본 해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자 러시아 해군의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할 목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를 건설하기 위한 망루터를 징발하게 된다. 이 때 사람이 살고 있었던 울릉도에서는 할 수 없이 망루터 만을 세군데 징발하였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던 독도는 망루터 만이 아니라 섬을 통째로 편입함으로써 다시 문제가 된 것이다.

이 때 일본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 전체에서 전쟁을 위한 군용지를 무단으로 징발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항의를 하거나 순순히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학살을 자행했다. 이처럼 알았

다고 하더라도 항의를 할 수 없는 공포상황을 조성해 놓고도 정작 독도는 편입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비밀리에 편입하지 않으면 안 될만큼 당시 독도는 군사적인 요충지였던 것이다.

그러고도 항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편입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후안무치한 주장을 해오더니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자신들의 영토권 침해라고 적반하장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이미 많은 양심적인 일본의 학자들이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심지어 나이토 세이쥬(内藤正中) 교수 같은 사람은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가서 귀중품을 몰래 가지고 나온 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주장과 같이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일갈한 바 있다.

나이토 세이쥬 교수 같은 사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자신들의 손을 들어 줄 것으로 믿고 있는 듯 한데 이는 프레아 비헤아 사원(Temple of Preah Vihear)사건의 판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캄보디아의 식민 종주국이었던 프랑스와 태국은 1904년에 동그라크(Dongrak) 산맥의 분수령을 경계로 하는 국경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 체결 후 국경지역을 측량하던 프랑스 공병장교가 프레아 비헤아 사원 유적이 태국 쪽에 속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의도적으로 캄보디아 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국경선을 왜곡하게 된다. 그리고는 국경선이 왜곡된 지도를 발간하여 1908년에 태국 정부에 전달하였다.

하지만 태국정부는 국경선이 왜곡되었다는 항의를 하지 않았고, 1930년 담롱(Damrong) 왕자가 동 사원을 방문하여 프랑스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후 국경선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태국이 캄보디아에 동 사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캄보디아가 응하지 않자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여 1962년에 마침내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는 태국이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이 판결은 지금도 사실관계보다 제국주의적 법리만을 중시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판결이 내려

진지 50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양국 간의 분쟁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와 명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故 이한기 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러한 제국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독도문제는 아시아국제사법재판소를 창설한 후에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외신에 의하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의 각료와 정치인 50여명이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를 참배했다고 한다. 생각해 볼 때 한국의 국립묘지와 일본의 야스쿠니신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의 국립묘지는 외세가 한국을 침략할 때 이에 맞서 싸우다 순국하신 분들을 모신 곳이고, 일본의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거나 제2차 세계대전 등을 일으켰을 때 이를 기획하고 계획하고 수행했던 사람들을 기리는 곳이다. 이곳을 참배한다는 것은 침략으로 점철된 부끄러운 과거사를 반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 한국을 식민지 지배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침략의 의지를 다지자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으로 제소를 하겠다는 것이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이나 과거의 제국주의적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위험하고 치졸한 행동일 뿐이다.

이처럼 제국주의적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게는 삼국사기와 세종실록지리지보다는 법률가들의 날카로운 논리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고시계 독자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한다.